

제11회 노회찬비전포럼 세미나 <월간 함:비>

25. 8. 28(목) 저녁 7시
노회찬재단 배움터
온라인 줌(Zoom)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진보정치 전략과 당면 과제

불평등 심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험,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의 확산... 지난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후보로 출마했던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함께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역할과 전략,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토론

이재정
광장을 잇는 '윤퇴창' 대표

참가신청



주최
노회찬비전포럼

문의
노회찬재단
02-713-0831



노회찬재단

이재명 정부 시대 진보정치의 전략과 당면 과제

1. 한국 양당제의 역사

노회찬 재단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시대 진보정치의 전략과 당면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주제인지 다들 알 겁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월이니까 해방 이후 한국 정당 정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국 양당제의 원형이 되었던 민주당과 자유당 이야기로 오늘의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북에서는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름의 사회 혁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는 시작부터 미군정의 개입이 있었는데요,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한 미군정의 목표는 한국이 북한처럼 좌익화 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남한의 좌익을 견제하고, 나머지 양대 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자유당이었습니다.

미군정이, 조봉암 선생이 간첩죄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는 것은 보호하지 않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민주당을 과하게 억압하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했던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박정희가 김대중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그를 보호했던 것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초기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결과 이승만이 4.19로 물러나게 되었을 때 민주당이 정부를 인수해서 미국이 원하는 역할, 즉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남한 정부가 언제나 친미 세력이도록 하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당은 언제나 친미 세력이고, 야당은 언제나 대체적 친미 세력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목표를 갖고, 친미도, 대체적 친미도 아닌 제3의 정치세력이 되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국 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을 통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노회찬 전 의원님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2. 첫 번째 전략_대선 약평 그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창당의 필요성

21대 대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 진보정치 진영의 선거연합을 선보였습니다. 적지 않은 기대와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치로 표현되는 득표율은 실망스러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TV토론 직후부터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다른 후보들과 비교를 해보니 후원금 규모가 이재명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21세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워낙 강해서 표를 주지는 못했지만, 진보정치가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 대선을 함께 치렀던 진보3당 그리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인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 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독자적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선거연합을 시도한 것은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성과이지만, 연합의 성과가 모두의 성장이 되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조직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의당 안에는 우리가 대선을 치를 체력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노동당-녹색당과 신호등 연대를 만들어 내고, 4개 산별노조와 노동운동,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대선을 치러보자고 뜻을 모았기 때문에 선대위를 꾸리고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았던 독자적 진보정치 진영이 선거연합을 통해서 ‘같이엮자 불평등 세상’ (평등 사회)이라는 공동의 가치로 선거연합을 이룬 것은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와 정당 제도가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선거에서 얻은 크고 작은 성과들은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함께 선거를 치른 각 조직들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일반 회원과 당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독자적 진보정치 진영의 연합이 지속가능하리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대선을 평가하면서 제가 대표로 있는 정의당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창당’ 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진보정치의 첫 번째 전략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두 번째 전략_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로

새 진보정당을 창당하자는 생각은 대선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만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12월 3일 계엄이 없었더라도, 조기 대선이 없었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계엄을 거치고 조기 대선을 해보니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진보정치의 전략과 당면 과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무엇에 대한 진보정치의 전략인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치의 변화에 대한 진보정치의 전략과 과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가 어떠한가에 변화의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한국 정치의 최근 특징은 양당 정치의 구심력이 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서른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보면 그보다 더 적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위시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7개 정당이 있으니 꽤나 다채로운 구성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당과 범민주당 계열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있을 뿐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스타일의 차이 외에는 지향하는 바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의 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고 최근 합당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

당은 민주당이 중심이 되었던 비례연합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진출한 범 민주당 계열의 정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 7당이 있지만, 이념적, 정책적으로 크게 대별해보면, 양당제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해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 양당 정치는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렇다보니 양당 정치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치의 사각지대라고 할 만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포섭하려다 보니 정당의 철학이 일관되지 않게 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친노동계 인사가 꽤 많아졌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문제를 중심으로 친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데 그렇게 되면 노동소득에 매기는 최고세율이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더 높아집니다. 한반도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평화를 핵심 가치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실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매우 모순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수주의(수구주의)와 자유주의 중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구도를 넘어, 평등과 생태와 분배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대변하는 정치가 위력적으로 등장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평등과 생태와 분배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대변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범민주계와 수구세력의 정당이 아닌,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창당이 필요하며, 이 새로운 정당은 기성 양당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당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당의 등장은 새로운 투쟁과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투쟁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여당과 제1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에서 노동시간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쟁점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작년 말에 국토부가 최종 승인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인과

그 주변에는 이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0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할까요?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서 끌어와야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국책 사업이고, 지방을 또 다시 희생시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송전망이 지나갈 예정지인 전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이미 주민들의 생태·환경적 감수성이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과 같이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기성 정치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인과 송전망 입지 예정지 주민들의 생태환경 파괴에 맞선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올해 12월에 태안화력발전소의 1, 2호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는 폐쇄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당사자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노동자들은 발전소의 폐쇄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발전소는 폐쇄되어도 삶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다른 방식으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가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전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양당 정치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중심에 놓고 있고 민간 시장의 고용 문제를 정부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전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제도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거대한 투쟁이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인정과 같은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쿠바까지 모두 18개 이상의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조사에서 성소수자의 비율이 약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어쨌든 이 7%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변화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

성결혼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권이 인정되는 사회를 위한 전 사회적 투쟁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장석준 소장이 두 번에 걸친 신문 기고에서 사용한 표현을 차용하여) 일명 ‘사회파’ 정치 세력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이) 부동산 대신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을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목매달게 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주식 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삶을 풍요하게 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에 앞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우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한 교섭과 협상으로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폐쇄되는 발전소의 노동자에게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또 증세를 통해서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이렇게 조성한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보장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부동산과 주식 외의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송전선로로 유지되는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위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에 부동산 시장으로 대표되는 세력과 주식 시장으로 대표되는 세력 외에 노동의 가치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파’ 정치 세력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개인을 넘어선 연대를 통해 공통의 정체성과 역량을 다지고 이에 바탕을 둔 사회 세력 간 쟁투, 교섭, 합의를 통해 권익을 확보하는 존재방식, 생활양식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 이에 기반한 진보정당 같은 결사체를 만들어 생존력, 발언력, 교섭력을 획득함으로써 공동의 성취를 이

룹니다.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파’ 정치세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대표적인 ‘사회파’ 정치세력이 되기 위해 13년을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좌고우면했고, 원내 정치에 많이 간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사회파’ 정치세력의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번 대선을 정의당 홀로 치른 것이 아니라 노동-녹색-정의당 신호등 연대와 공공-금속-보건-화섬 등 네 개 산별, 그리고 다양한 노동-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치렀습니다. 이 동지들에게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을 함께 고민하자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4. ‘사회파’ 정당의 과제

4-1. 860만 무권리 노동자들의 정당

저는 노동 중심 정당을 대표 취임 때부터 말해 왔습니다. 이윤 중심이 아니라 노동 중심 사회를 자주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중심을 말할 때는 항상 ‘노동’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만들어 온 지고의 가치가 ‘이윤’ 중심인 것에 대해 ‘사회파’ 정당은 ‘노동’ 가치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이윤 중심 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3권에 제약을 가하고, 근로기준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노동 중심 사회에서는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이 제약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계약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물량팀 노동자부터 편의점 알바 노동자, 교통사고조사원까지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가짜 3.3 노동이 유행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어느 새 860만 명에 육박합니다. 사장과 맺은 계약에 의하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860만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최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의 3.3계약 전수조사를 정부에게 촉구하고 이들에게 4대 보험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루노동자, 삼성애니카 노동자 등과 함께 3.3 전수조사 추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서 3.3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당대표인 제가 직접 챙기고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이 사업에 나서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3.3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일명 334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정의당 뿐 아니라 정의당이 창당으로 제안하는 새로운 ‘사회파’ 정당은 860만 무권리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들을 핵심적인 지지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4-2. 정의로운 전환을 전략 과제로.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가장 먼저 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이 서산-태안 지역입니다. 태안군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올해부터 발전소 폐쇄가 시작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공동화 문제,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후위기 대응이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 농민, 지역 사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 과정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2026 서산-태안 플랜’ (태안군은 서산시에서 분리된 지자체. 단일 생활권이며 서산태안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을 고민할 수 있

습니다. 서태안 플랜은 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 시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당사자들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전환은 태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보령은 발전소 폐쇄로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2026 서태안 플랜’ 을 들고 서산이나 태안에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이 성공해서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신할 공공주도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이 지역에 지방에너지 공사를 설립할 것,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연구센터를 건립할 것, 발전소 폐쇄에 지역 노동자를 고용하고, 분산에너지법 입법을 통해 소규모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마다 활성화 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주민들과 산업 노동자들이 이 전환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발전소 폐쇄를 앞둔 서산-태안을 비롯해 하동군, 고성군(경남), 용진군(인천) 등도 보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2026 서태안 플랜’ 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상이 왜 필요한지 말해주는 좌표가 될 것이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보여주는 설명문이 될 것입니다.

4-3. 송전망 투쟁에 주목함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 울산 신고리 핵발전소의 전기를 창녕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 건설 반대에 밀양 주민은 물론 국내외 단체들이 함께 연대했던 투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송전탑/송전망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들어설 235만평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단(클러스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합니다. 산단 완공시 최소한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원전 약 10기 규모이고, 국내 전력 수요의 10%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3GW는 LNG 발전소 추가 건설로, 7GW는 남부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도 고흥에서부터 경기도 용인까지 전기를 끌어오느라 수많은 송전탑이 한반도 정중앙을 통과하여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해저터널과 해남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라인도 준비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며 전국의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망을 따라 주민들의 투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읍 등 전북 8개 시군에서도 주민들이 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를 만들었고, 금산 등 충남 지역에서는 저를 찾아와서 관련 재판의 변론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수도권인데,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업이 있는 곳으로 전기를 가져가는 대신 전기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기업 이전 및 직원 복지 지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대한 반도체 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향후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송전탑은 기후 문제이고, 에너지 문제이자, 산업 문제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문제이고, 지역주민의 투쟁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송전탑 너머에는 한전이 있고, 삼성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라이프 모델을 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새로운 대중정당을 꿈꾸는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AI에 ‘올인’ 하고, 기업에는 우호적이지만, 기후·생태 분야에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반도체 산단과 이를 위한 엄청난 갯수의 송전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주도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진보정당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4-4. 지방선거,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로.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가 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대선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란세력 완전 청산이나 아니면 견제 세력을 통한 균형이냐의 구도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주요 전선이 그어질 것이고, 조국혁신당이나 위성정당 세력은 범민주당의 자장 안에서 민주당과의 지역 협상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대결로 만족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 추진 세력과 함께 ‘사회파’ 정치 세력로서의 서사를 만드는 선거 전략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말한 ‘서태안 플랜’은 하나의 강력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이를 위해 건설되는 전국 각지의 송전 첩탑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정의당과 새로운 창당 세력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시대에 수도권에 대규모 산업 단지를 만들고 이를 위해 지역을 식민화하는 송전망 건설사업(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방선거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인 용인과 송전 첩탑 예정부지인 정읍, 금산의 주민 반대투쟁을 연결하는 선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면 공공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근 도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오히려 적극적인 인구분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부터 국공립대학 무상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무상 교통 정책이 지방부터 정부 지원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양당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진보정치 세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산태안, 용인과 정읍, 금산을 연결하는 기후위기 서사를 지방선거의 중심 서사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개헌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밝힌 지방선거와 총선을 경유하는 개헌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완결 짓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을 경유하면서 순차적 개헌을 하자는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는 개헌은 내란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헌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높은 개헌 주제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계엄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대통령 궐위 시 승계 1순위를 임명직 총리와 장관이 아니라 선출직 국회의장으로 개정하자**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지방선거에서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그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비화되어 극우세력에게 다른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란 세력이 100석 이상을 점하고 있는 국회를 개헌안 초안 마련의 주체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극복한 국민들 중 추천에 의해 개헌 시민회의를 조직하고 이들이 개헌안 초안과 개헌 일정을 제시하게 하는 아일랜드 방식이 우리 상황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다룰 때 2/3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개헌안과 국민투표를 국민들도 일정한 요건 아래 발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헌법의 경성헌법으로서의 성격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서두에 우리나라에서 양당 정치가 어떻게,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해방 직후에 날개를 폈다가 꺾여버린 조봉암 정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본격적인 ‘사회파’ 정치세력의 필요성과 등장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을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서 완주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복합 위기를 극복할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수구-보수의

양당정치에서 ‘사회파’ 정치세력의 정당이 등장해서 대안 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형성의 꿈을 부풀리던 보수주의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삶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이것이 훨씬 더 건전하다고 말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여기 노동과 공동체의 가치로 삶을 기획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파’ 정치세력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덕을 볼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식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 활황의 결과는 불평등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노동과 공동체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대신 우리 모두를 존엄하게 합니다.**

당장의 생존과 매일 매일 벌어지는 정치권의 극단적인 논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가겠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통해 이승만은 우리나라 혁신정당 운동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혁신계 인사들의 통합 노력은 1961년 박정희가 무참하게 밟아 버렸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이 끊어진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흐름을 아직은 완전하게 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 미완의 과제를 이어가자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노회찬비전포럼 세미나 <월간 함:비>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진보정치 전략과 당면 과제

이재정 (광장을 잇는 윤퇴청 대표)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은 ‘광장을 잇는 윤퇴청’의 이재정입니다. 우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광장의 이야기를 다뤄주신 권영국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TV 토론 등에서 사회 소수자들의 존재가 잊히지 않고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보정치의 전략과 과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지만, 진보정당 소속이 아닌, 광장의 활동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청년에게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좌표의 필요성

발제문의 핵심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창당’입니다. 저는 오늘 논의가 단순히 새로운 정당의 명칭이나 형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청년·여성 세대가 처한 구조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좌표를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지난 5년간 청년세대 삶의 지표가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대기업, 스펙, 코인, 주식, 부동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한 계층 사다리에 내몰렸습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생존 전략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는 청년들에게 마땅한 대안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삶이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좌/우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존재들이 많아지고, 현재의 양당 구도는 이 존재들을 충분히 담아내지도 다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디지털전환·인구구조의 개편 등 점차 다변화되는 위기 상황로 인해 보다 다층적인 정치적 개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민주화 세대가 만든 좌우/양당 구조로는 청년·여성·진보의 다양한 아젠다들을 설명하거나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기후 등 다양한 교차 축을 통해 정치를 다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좌표를 상상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대선평가 : 여전히 ‘세대교체’ 필요해

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단호하고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 후원금이 쏟아졌지만, 0.98%라는 숫자는 낙관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후원금은 소중한 지지와 연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끝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의 회피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현상(낮은 득표율, 그리고 후원금)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음 선거에서 정의당으로 선택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란 쉽진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대선 결과를 계엄과 내란에 따른 결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선을 경유하여 진보정치의 다음을 고민할 때,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정의당 또는 범진보연합이 다시 지방선거 대응을 할 여력이 남아있는가입니다. 권영국 대표께서는 노낙정 신호등 연대와 4개 산별노조, 사회운동 단체들 간의 독자적 진보정치 연합을 강조하셨고, 이 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셨는데, 정의당이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은 무엇이었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대중정당’으로서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었다고 평가하시는지, 이와 같은 방식이 지방선거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시지도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은 안동, 노동당은 울산 등 주력해온 지역에서 기존의 자원을 끌어모아 성과를 내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연합이 더 나은 자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두번째는, 내란 국면임에도 이준석에게 향한 표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표가 될 걸 알면서도 이준석 개혁신당에게 소신투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선 이후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2025 대선 리포트 웹조사’에 따르면,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에게 투표한 주요 요인은 ‘심판론’과 ‘상대 당선 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세대교체’와 ‘거대 양당제 균열’을 상징했습니다. 이준석 지지층의 상당수가 소극적 지지자(57%)였다는 점은 이준석이 제시한 반페미니즘, 반소수자 정책에 적극적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젊은 이미지와 제3당의 필요성이 대중에게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적극적 지지는 21%).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그리는데 ‘세대교체’는 여전히 중요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할때, 정의당과 진보정당은 정책적·아젠다적 전략을 고민함과 동시에 청년 정치인 양성·영입 전략, 선출직 인재 교육에 대해 충분한 전략과 고민이 논의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을 떠올릴 때 정의당 역시 장혜영과 류호정으로 대표되는 청년 정치인 영입 시도를 해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와 나아간 논의와 진전이 있었는지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더 나은 방향의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선 인물과 조직을 결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AOC로 상징되는 인물과 JD(정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원들),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같은 단체의 결합은 인물과 조직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방식으로 선거에서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가령 최근 지역별로 권영국 후보를 뽑은 주민 간의 모임이 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임을 지원하여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의 활동가들이 당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당안팎을 오가며 시민들을 만나고 운동을 조직하는 경험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JD의 경우 인재 발굴을 위해 알려진 활동가나 지역 유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접촉하고 조직의 심사를 거친 검증된 사람들에게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조직을 유지하고

선거전략을 세우는데 후보자 발굴을 가장 큰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JD의 로하스는 이를 ‘정치구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으로 설명합니다(미국이 불타오른다 참고).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진보정치의 전략’은?

권영국 대표님은 발제를 통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창당과, 양당제를 넘어선 사회파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보정치가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뽑았습니다. 개별적인 아젠다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이재명 정부 시대’, ‘진보정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석준 선생님 역시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양김 씨 이후 오랫동안 보는 노련한 정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어떻게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영역에서 현직 철도기관사이자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SPC, 쿠팡,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현장 방문과 꾸짖음 등은 진보정당 인사들 조차 놀랄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형이라고 볼 순 없지만 해묵은 과제였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산재에 대한 적극적 대응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일정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틈을 파고들 것인지 치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진보정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력적 견인입니다. 정부 정책 자체는 인정하되 사회적 안정망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AI 육성은 지지하되 지역고용과 노동전환 안전망, 알고리즘 책임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진보정당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적 실력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특히 AI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만큼이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의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노동 격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비워둔 영역의 의제를 선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젠더평등, 기후재난 불평등, 무권리 노동자 보장 등이 그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원외가 된 상황에서 제도 외부의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놓쳐선 안되는 부분이 사회운동이 아닌 권력기관으로써 진보정당의 역할을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운동보다 정당/정치세력이 더 갖춰야 하는 것은 협상력과 조직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지점의 차별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성과주의보다는 2028년 원내 재진입을 목표로 지역에서부터 토대를 쌓는 확장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청년세대가 기대하는 ‘다른’, ‘새로운’ 진보정치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이후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 대기업 등 새로운 계급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에 올라타기 위한 부동산, 주식, 코인 열풍은 과열되고 있으며, ‘액화노동’으로도 이야기되는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포섭되지 않는 다변화된 노동형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고자 하는 청년들의 욕망을 다그치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욕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답습해온 청년들의 생존경쟁을 이기적인 세대의 문제로 치부하며 욕망을 부정해버리는 방식으로는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더 나아가 586 민주진보 세대의 ‘내로남불’식 행태는 청년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실망과 열패감을 주고 있고,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회파라는 발상이 어떻게 청년세대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설득력 있는 언어가 필요하고, 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주체 역시 새로운 얼굴이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산업화-민주화 이후 어떤 구체적 비전과 시대정신을 제시할 수 있을지 저 역시 기대가 됩니다.

저는 광장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그 목소리들을 수집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지지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강한 열패감과 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퇴청이 3월 진행한 광장 청년 대상 FGI에서는 대선 표심에 관한 질문에 광장을 대변하는 후보를 뽑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대부분 ‘표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 ‘방어전을 위한 정치적 선택’ 등으로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습니다¹. 사회대개혁 아젠다에 대해서도 자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이미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노동, 주거, 여성, 환경 등의 문제가 개선되거나 시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과 양당구도는 상당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적 선택지를 주지 못하고 이는 한국사회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존재와 목소리들을 더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지만,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의 장이 진보정당이 독자적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핵심은 여성 유권자와 무권리 노동자 조직입니다.

발제문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여성 유권자 조직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진보정당의 상당한 지지는 2030 여성 유권자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의 진보정당 지지율 상당 부분은 여성, 환경, 이민 문제에 포용적 입장을 가진 2030 여성 유권자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진보정당의 정치전략에 여성 유권자 조직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은 큰 허점입니다.

¹ 참고) 본 연구에서 광장 대응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당 및 정치인 응답 30건 중 정의당을 언급한 것은 3건(그중 1건은 장혜영으로 특정하여 언급)으로 생각보다 낮았다.

여성 유권자 조직의 핵심은 성평등 정책과 메시지입니다. 현재 한국사회 정치지형에서 가장 큰 빈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을 넘어선 진보정당만의 성평등 정책 개발과 대중적 여성 유권자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영역이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미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노동조합이나 정치세력이 조망하지 않았던 사업장과 의제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부여하여 선출직의 얼굴로 대표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18대 대선에 청소노동자 김순자가 있었다면, 22대 대선에는 프리랜서 노동자 후보, 플랫폼 노동자 후보, 무권리 노동자 후보가 진보정치의 새얼굴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광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입니다. 이번 내란국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극우 기독교 세력이 점점 더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기조로 규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당한 후퇴를 겪었고, 이에 대한 복원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발제문에서 해당 의제를 '7%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변화'라고 짚어주셨지만,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저지 전선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제의 대중적 확장력을 고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시하신 기후위기 대응 서사를 통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짚어보겠습니다. 의제 자체의 중요성과 지역의 의제를 중앙으로 가져오는 시도 역시 모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태안, 용인과 정읍, 금산을 연결하는 기후위기 서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지방선거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장 기반 조직화 전략은 상당히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일텐데, 당의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고려되어야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산-태안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기후 재난 불평등 등 보다 전국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중적 아젠다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여봅니다.

개헌. 지역시 순차적 개헌에 동의하며, 이번 기회에 중요한 의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사회에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효능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개헌 청원, 상설적 국민참여기구 제도화, 시민의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목소리를 낸다면 시민참여형 개헌과 시민위원회 구성에서의 개입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제 몫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지 않는 무권리 존재들이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가며

여러므로 정치가 혼란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란청산이라는 과제가 잘 완수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계엄 이후 더욱 한국사회가 후퇴하고,

복원하는 것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정세의 혼란과 저성장 경제의 지속은 보수화된 정치지형을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큼니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층적 위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진보정치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견제 역할로서도 정치적으로 유효한 독자적 진보정당이 확고하게 있어야 사회가 보다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 시대에 유효한 진보정치의 역할과 전략을 고민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